

5·18묘역 무릎 꿇은 인요한 “5·18정신 헌법 수록 최선”

국힘 혁신위 5·18묘지 참배...“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민주 광주시당 “5·18 왜곡·편향 인사 등용부터 막아달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0일 취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0일 첫 외부 일정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혁신위원 12명 전원과 함께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에 나섰다. 인 위원장은 방명록에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남겼다.

국민의힘 혁신위원과 광주시당 인사들과 함께 5·18민주항쟁 추모탑으로 이동, 헌화·분향을 한 인 위원장은 행방불명자 묘역을 찾았다.

인 위원장은 행방불명자 묘역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묵념했다.

앞서 2020년 8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곳을 찾아 ‘무릎 사과’한 것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다.

한 시민이 김급단 열사 묘역 앞에서 “묘비를 읽어달라”고 요청하자 “묘문이 막혀서”라고 답하면서 잠시 멈춰 서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참배를 끝낸 뒤 민주신문 입구에서 “제가 글씨도 잘 못 쓰고 묘지 앞에서 묘문이 막혔다. 도저히 그냥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나오지 않아 죄송하다”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80년 대학 1학년때 (옛 전남) 도청에 들어가 통역했는데 두 가지 뚜렷한 기억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첫째는 북쪽을 향해 우리를 지켜주는 총이 왜 남쪽을 향하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무원통하다”며 “두번째는 우리를 공산주의자라 하는데 우리는 매일 애국가를 부르고 매일 반공구호를 외치고 하루 일정을 시작한다는 시민군 대표 말씀이 오늘날까지 귀에서 쫓겨 울린다”고 회상했다.

이어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에 큰 업적이었다. 우리 기억 속에 계속 남아 있다”면서 “우태인들이 한 말 말리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고 말을 이었다.

그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광주의 의미를 잘 가르쳐서 또 앞으로 광주의 피해자 가족, 또 돌아가신 분의 후손, 이런 분들을 적극 챙겨서 지방에서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이제는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이 분들을 다 포용하고 어디든 가서 자랑스럽게 자기의 조상이나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여기는 추모의 장소다”고 선을 긋고 민주묘지를 떠났다.

이에 앞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오월단체들은 인 위원장에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인 위원장은 “꼭 관철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인 위원장이 떠난 뒤 김정진 혁신위원은 “혁신위 첫 회의때 모두 함께 하는 공식 일정은 동서회합, 대한민국 국가 통합을 위해서 광주 5.18 묘역 (참배) 첫번 째로 하면 좋겠다고 의결했기 때문에 첫 일정이 광주 5.18 묘역 단체 참배”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국민의힘 혁신위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것과 관련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진정성을 갖고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혁신위가 5·18 왜곡 인사 등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출범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것은 또 다른 5·18 편향이자 정신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내 통합을 이유로 1호 안건으로 “5·18 헌법전문 수록은 표를 얻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징계 해제를 건의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김광동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북한군 남파설을 주장한 차기환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5·18 왜곡 기사를 써온 이동욱을 KBS이사로 선임한 것도 비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尹 “국민의 민생현장 절규 응답보다 우선적인 일 없어”

기사대와 ‘용기 있는 사람들 상’ 수상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고 소개했다.

또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전했다.

이밖에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김영란법’ 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적용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성과와 관련해 “올해 초 UAE(아랍에미리트) 국민 방문에 이어 중동 ‘빅(Big)3’ 국가와 정상외교를 완성했다. 792억불,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기사대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수상했다고 30일 대통령실이 전했다. 미국 보스턴 JFK 재단 도서관 겸 박물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조현동 주미대사가 대리 참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지지율 35.7%...3주만에 3.2%p 올라

리얼미터...부정평가 61.9%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16~20일)보다 3.2%포인트(p) 오른 35.7%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최근 2주 연속 하락(37.7%→34.0%→32.5%)하다가 3주 만에 오른 것이다.

부정 평가는 2.2%p 내린 61.9%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8.0%p ↑), 인천·경기(5.9%p ↑), 광주·전라(2.7%p ↑), 대전·세종·충청(1.7%p ↑)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힘 혁신위, 이준석·홍준표 ‘대사면’ 건의

김재원 포함...내달 2일 최고위 결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0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징계를 해제하는 ‘일괄 대사면’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립현충원 인근 카페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오신환 혁신위원(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전했다. 징계 해제 여부는 다음 달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혁신위는 당 화합 차원에서의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논의해왔다. 현재 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김재원 최고위

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 등 4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오 혁신위원은 “특정인을 호명하는 건 아니다”라며 “누구부터 누구까지 할 것이냐는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남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기존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 징계로 1년이 더해지면 서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린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식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